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한의 축전외교: 북중관계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Online Series

2021. 07. 05. | CO 21-19

이 재 영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북한은 축전외교를 통해 북중관계에서 조중 친선이 동북아시아 지역평화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추동에 그 역할을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이러한 축전외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은 이후 북미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준비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평화의 봄이 2022년 평화의 봄으로 재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전후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국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다. 이러한 한미일/북중러의 대립구도와 상호견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남북관계의 주도성이 훼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의존하고 정치 제도화와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모델을 추종하기보다, 민주화되고 번영한 한국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이 핵 보유와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중국과의 혈맹을 통해서만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1차 당 대회 당시 당원 58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천만 명이 넘는 당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정당으로 올해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맞았다.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기념식에서는 인민복을 입은 시진핑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와 함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 7만 명의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 만세’, ‘중국 인민 만세’의 일제 합성을 질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이 일어서면서 중화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피와 살로 만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릴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북중관계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북한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외교’를 통해 중국과 미국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선 축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혁명 승리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개척,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마련을 축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18차 당 대회 이후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 전면 건설, 빈곤 탈출, 보건위기 극복, 종합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¹⁾ 축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선전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선전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의 업적과 실제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중국 공산당의 행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축전과 95주년, 90주년 축전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북중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그 이후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전후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 편들기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중국발전모델이 북한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북한 축전외교 메시지 변화와 북중관계: 2022년 한반도 평화의 봄은 재현되는가?

김정은 위원장의 100주년 축전과 지난 중국 공산당 창건 95주년 축전(2016.7.1.)과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 축전 내용 중 조중친선의 역할에서 “사회주의 건설 추동”과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전 수호”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었다면, 이번에는 “사회주의 건설 추동”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인 중국 공산당 창건 90주년 축전

1)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핑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1.7.1., 1면.

(2011.6.30.) 때도 김정은 위원장은 조중친선이 사회주의 건설의 추동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100주년 축전에는 지역(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번 축전에서 조중친선의 역할 가운데 특히 사회주의 건설만 남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왜 빠진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중국과의 당 대 당 관계와 사회주의 전통 우호 관계강화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갈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담보 상황 속에서 북중친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자력갱생 전략 속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에 치중함으로써 당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발로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북미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축전외교의 또 다른 변화를 살펴보면, 5년 전인 95주년 축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강화, 사회 안정 유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중화민족 부흥 실현에 중국 공산당이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기원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중국이 그러한 성과를 아직 실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축전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 이번 100주년 축전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개척, 국가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이미 마련’했다는 사실과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업적 달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 북한은 김 위원장의 특사격으로 리수용 북한 당 중앙 부위원장을 베이징으로 파견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같은 해 7월 1일 95주년 ‘축전외교’로 북중관계 복원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도 있었다. 앞서 북중관계는 시진핑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20일 정도 앞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경색되었고, 2015년 말 모란봉 악단의 돌발적인 공연 취소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북중관계는 다시 악화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2016년 95주년 축전외교와 1차 북중 정상회담(2018.3.25.)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곧바로 2018년 평화의 봄을 맞이했다. 즉 북중관계 회복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의 신호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6.12.)을 전후로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2018.5.7.; 2018.6.19.)이 개최되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2.27.)이 개최되기 전에도 김정은과 시진핑 두 정상은 만났고(2019.1.7.), 남북미

판문점 회동(2019.6.30.) 직전에도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하여 5차 북중 정상회담(2019.6.20.)이 성사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은 이후 북미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100주년 축전외교를 통해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높이로 승화 발전시켜’ 북미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7월 11일)과 전송절(정전기념일, 7월 27일) 전후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후,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겨울에는 방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를 통해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전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 차례 이상 친서를 교환했고, 북측의 반응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화의 봄은 4년 후 이제 2022년 평화의 봄으로 재현되어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 편들기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미, 유럽, 아시아 17개국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월 진행된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모두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88%, 한국 77%, 미국 76%의 응답자들이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의 인권 문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낮은 신뢰, 외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성 등이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와 러시아와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강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요 관계국인 북중러/한미일의 두 진영 사이에 갈등과 분쟁만 부추겨 북핵 문제와 제재문제에 있어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지난 5월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협상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6자회담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북미 양자 회담의 형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샴보는 북핵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중국 전문가의 이러한 평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처럼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과소평가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

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기 전 항상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중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²⁾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고 기꺼이 하려는 중재 역할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미 양국이 견인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중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발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며”라고 최근 중국의 핵심이익을 둘러싼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대중 제재 등의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특히 축전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며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위업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하며”라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홍콩, 신장위구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2021년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즉 북한은 북미관계를 미중관계에 투영함으로써 중국 편에서 미국과 싸우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둘 다 제재 국면에서 정도는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을 추구하는 처지에 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자기 투영은 축전과 함께 『로동신문』 7월 1일 사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18차 당 대회 이후 “적대세력들이 중국의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발전을 저해하려고 비난과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을 신뢰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다.³⁾ 즉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적대세력들의 방해와 압박을 막을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당국은 북한 인민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는 것이다.

북한 주재 중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은 6월 21일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계속 굳게 단결하여 보다 큰 새로운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며”라고

2) 지난 6월 30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북한의 미래’ 세션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주류였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핵 해결책에서 중국은 진부는 아니지만,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 장점은 개방성…북한,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안돼,” 『조선일보』, 2021.7.1.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월 4일 파이낸셜타임스와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중국공산당창건 10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2021.7.1., 1면.

설과함으로써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인민에 대한 영도력과 신뢰가 성과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업적 정당성을 강조했다.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해협 사안들이 논의된 직후, 5월 2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주중 북한대사인 이용남을 다오위 타이 국민관에서 이례적으로 만나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피로 맺은 북중 우의”를 강조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와 북중동맹 강화의 대립 구도와 상호 견제가 지속된다면 자칫 남북관계의 주도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북한 발전에 주는 함의: 중국은 북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나?

이번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인지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의 장기집권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오히려 이러한 권력집중과 정치 제도화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 아래에서 시진핑 일인의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와 동시에 중국 당정 국가체제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일인 지배체제가 강화되면 제도화 개혁은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중국모델의 핵심은 일인 지배체제와 제도화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도화가 권력 제한의 기능도 있지만 권력에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 시진핑 시대 집단지도체제를 집권형 집단지도체제로 보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점으로 시진핑이 일인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당 주석제를 부활시킬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당 총서기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장기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확실한 잣대가 될 것이다. 시진핑의 이러한 일인 권력 강화가 엘리트 합의에 따른 것인지 두려움의 정치에 의한 것인지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의 개정과 시진핑 사상의 당헌 삽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진핑 개인의 권력욕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진핑 시대 권력 집중현상은 중국제도화와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즉

4) “변함없는 초심과 확고한 포부를 안고 중조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 『로동신문』, 2021.6.21., 4면.

시진핑 시대 제도화의 내용과 방향이 당 규정 강화와 당 제도화 추진, 공산당의 통치 제도화로 바뀐 것일 뿐이지 제도화 개혁이 퇴행하거나 멈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당정관계의 제도화와 함께 당의 전면 영도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부패 운동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⁵⁾

중국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당시 선부론을 제시한 이래 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중국 지니계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0.480에 근접한 0.465까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저장성의 ‘공동부유 실현’ 실험을 통해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실험이 저장성의 성공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8일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는 부임 후 첫 중국 지방 방문지로 저장을 선택했고, 이는 저장성이 알리바바와 같은 민영기업의 요람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고향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공동부유의 실험실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한 공식 문건은 공동부유가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집권 기반이 달린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주중 북한대사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실험지역을 돌아봄으로써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학습하고 북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혼합소유제와 기업현대화를 중심으로 국유기업개혁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와 같은 민영기업 규제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서도 당의 전면 영도강화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산당 중앙 조직부는 2020년 발표한 <당내 통계 공보>에서 2019년 말 중국 내 1561만여 민간 기업 가운데 당 조직 비율이 약 73%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산당의 민간 기업 침투율은 개혁개방 이후 급증했다.

중국 모델의 대외적인 측면을 보면, 미중 갈등과 경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쌍순환 전략 추진 속에서 만약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장과 권력 강화가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통치 정당성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제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이 외교결정권까지 가지게 되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대외관계에서 사사건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과 대만 문제에 중국 공산당이 직접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5) 중국 시진핑 시대 일인 지배체제와 제도화의 강화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고. 조영남, “중국공산당 100년과 시진핑 시대의 중국 평가,” 현대중국학회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 특별 춘계학술대회 <중국공산당 100년, 중국은 무엇을 이루었고 어디로 가는가?>, 2021.6.29.,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⁶⁾

중국은 자꾸 서방식 다당제 민주 선거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식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국무원이 펴낸 『중국 신형 정당제도』 백서에 따르면 중국식 협상 민주주의는 “서구식 양당제나 다당제, 일당제와 달리 공산당이 주도하고 다수의 당파가 협력과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인 선거가 없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과 의미 있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일당 독재 체제에 어떻게 민주주의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당국은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무산군에 수출 가공구역을 설립했다. 이 수출 가공구역은 중국 원자재 기반 제품 생산과 중국으로의 재수출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⁷⁾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한당국은 이러한 중국과의 위탁 가공 교역을 대북 제재를 우회할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주중 외교 사절단은 지난 5월 13일 중국 정부가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담당을 위해 400조 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숭안신구의 개발 전시관을 참관하여 인프라 건설, 녹색 생태 발전 정책을 학습하고 북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도에서 벗어나 남북 경제협력을 위기극복을 위한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위탁 가공 교역보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제재 면제를 얻은 후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남북 간 위탁 가공 교역을 시급히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도시 정비나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제재로 당장 물자 이동이나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도시개발 관련 지식 공유사업을 통해 남북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정치 체도화와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모델을 추종하기보다, 민주화되고 번영한 한국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이 핵 보유와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중국과의 혈맹을 통해서만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북미 관계 개선 이후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의 조건 속에서 북한이 경제 개발구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할 때에만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6) 조영남, 현대중국학회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 특별 춘계학술대회 <중국공산당 100년, 중국은 무엇을 이루었고 어디로 가는가?>, 2021.6.29., 토론 내용.

7) 양혜연, “북한, 중국과의 무역 재개 및 중국 국경 근교에 수출 가공구역 설립,”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2021.5.27.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